

미래대응기금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은 성장의 과실을 취약계층과 나누고, 전력망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10.7.(수) 매일경제, 「취약층 전기료 왜 지원?... 미래기금 사용처 논란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미래대응기금의 신규 사업 중 ‘미래 대응’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.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이 대거 포함돼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”며,
 - 한국전력이 자체 부담해 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지원 사업에 3,50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,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 등 1,000억원을 지급하는 ‘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’이 포함되는 등 지원 대상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-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, 성장동력, 지방, 교육·인재 4대 분야에서 인적·물적 자본형성, 과감한 투자 등 NEXT 원칙*에 부합하는 사업과, 기금 재원이 국민적 노력으로 발생한 추가세수인 만큼 성장의 과실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.

* ^N자본축적(New-Capital), ^E과감한 투자(Enterprising), ^X탄력적 집행(fleXible), ^T시급성(Timely)

□ 기사에 지적된 사업들의 미래대응기금 반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(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) 취약계층과 초중고 학교 냉난방 및 미곡·천일염 등 FTA 농가 등에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수혜자 지원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, 전기요금 할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.

- 아울러,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적인 전력망을 한전이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재무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

② (공공기관 기능개혁) 기관 간 유사·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분산된 기능을 재편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구조개혁으로, 경제·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과제에 해당합니다. 내년도 예산안(1,000억원)은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·수당 등 제도·처우의 차이를 조정하여 기능개혁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한시적 전환지원 재원입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예산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	과 장	김건민 (044-214-23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영 (zudoro@korea.kr)
	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의영 (044-214-257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문 (krrard419@korea.kr)